

민주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최상목 대행 압박

박찬대 “여 요구 수용했는데 거부” “여야 합의만 요구...입법권 침해” 최 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 고심 국힘 “尹 구속으로 의미 없어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수용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

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야당이 앞서 추진했던 원안 대비 수사대상과 기간, 규모 등이 축소된 수정안이다.

특히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당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 전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조속히 출범해야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 전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등은 자체적으로 정한 입법 시한까지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을 지난 17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내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 대행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중인데,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관측이 높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국면에서 ‘특검 무용론’을 꺼내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내에서는 야당 특검법의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했지만, 사실상 이 조항으로 별건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수사 범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아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속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최 대행, 국가범죄 특례법·방송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정부에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관련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5당, 국힘 윤상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서부지법 월담자 훈방’ 언급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준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명 촉구 결의안 ‘주문’에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적양된 시위대들을 향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들을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전날인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엄청난 폭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과잉진압의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중에 윤 의원은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 등으로 얘기를 하며 폭도를 추종하는 듯한 행태를 벌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설 연휴 앞두고 ‘지역화폐법’ 재발의

“유류세 인하 연장...추경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10가지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역화폐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한민국 국민동행 광주·전남본부 발대식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국민동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등이 2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

국 국민동행 광주·전남본부 발대식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민주, ‘법원 폭동’ 본회의 현안질의 추진

“우 의장에 23일 본회의 요청” 내달 3일 임시국회 개회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을 위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과 사법부 침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와 진상 규명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원 폭동 사태는) 무질서의 극치이자 헌정 질서 파괴를 보여준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날 관련 현안질을 진행한 만큼 본회의 질의를 별도로 갖는 데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은 “23일 현안질을 하자고 했더니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대한다”며 “박 원내수석은 법사위

와 행안위(현안질의) 했기 때문에(본회의 현안질의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상임위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본회의 현안질의)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의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월 3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다.

2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2~14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 적용 안 할 듯... 경찰 고심

다중이 지역 평온 해쳐야 인정 2015년 ‘민중총궐기’ 때 적용돼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시위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두는 등 엄정 수사 기조를 밝혔으나 일각에서 제기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사태를 일으켰을 때 통상 인정되는데, 경찰은 이 입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집합한 46명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

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의 죄목에 소요죄는 추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적인 집회·시위사범 처벌조항보다 형량이 그리 크지 않으나, 소요죄가 적용되면 국가기관이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한 효과가 있어 일각에서 소요죄 적용 주장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소요죄 적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사태의 규모와 우발성에 비춰봤을 때 소요

죄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도 거의 없다시피하다. 알려진 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조 위원장에게 경찰이 형법상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례다. 당시 경찰은 한 전 위원장과 민주노총 등 집회 주최 단체들이 서울 세종로 일대로 점거와 경찰 차벽 파손,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를 미리 기획하고 선동했다고 보고 소요죄를 적용했다. 당시 다친 경찰관은 90명, 파손된 경찰 버스는 52대에 달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폭력 행위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뉴시스